

김관영, 새만금위원회 유명무실 질타

“올해 단 한 번도 개최 안해… 새만금사업추진단, ‘삼성 투자MOU·LG CNS 스마트팜’ 갈등에서 역할 못해”

정부와 민간까지 아우르며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조망하고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은 26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새만금사업의 힘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새만금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2번씩 개최된 반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관계부처 합동) △새만금방조제 준공 준비상황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농식품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관계부처 합동) △유보구간 방수 시설물 축조방안(관계부처 합동) △새만금 국제심포지엄(환경·관광개발) 개최 계획(환경부·문광부)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올해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위원회 기능을 상실했다고 불 수복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위원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심지어

어 개최도 안한 것은 새만금과 전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2월 출범해 실질적인 관계 기관의 정책 통합·조정과 새만금위원회 운영 역할을 맡긴 새만금사업추진단의 미진함도 지적했다.

올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투자MOU, LG CNS 스마트팜’ 관련 지자체와 기업,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 당초부터 현장으로 이전이 예정됐던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입주

하고 있는 주민센터 점유 논란으로 세종시와 갈등의 골이 적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행자부가 예산이 먼저냐 청사수급계획 수립이 먼저냐며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전면에 서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만금위원회는 2009년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 그리고 각계 13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해 출범해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전반적인 청사진을 공유하고, 조율·제언하는 역할이 기대돼 왔다.

조배숙 “말뿐인 기업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성과공유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2년 77개사에서 2016년 8월 현재 245개사로 증가했고, 참여 수탁기업 현황은 2012년 566개사에서 현재 3,990개사로 증가했으며, 등록과제 건수는 12년 997건에서 현재 8,12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245개 기업 중 159개(65%) 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으로, 성과공유 실적 당사자인 대기업은 86개사(35%)에 불과했으며(실제 이들 대기업의 성과공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대기업, 공공기관, 1차 중견기업을 모두 합친 245개 기업의 현금성 성과공유 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8월 현재까지 6,843억, 그 중 직접적인 현금배분 실적은 573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단식 농성 중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의원들의 지지방문을 받고 정진석 원내대표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도내 각 정당, 고 백남기씨 관련책임자 처벌 촉구

국민의당 “진상 밝히고 책임자 처벌 촉구” … 정의당 “부검명장 청구, 숨은 의도 의심”

도내 각 정당들이 고(故) 백남기씨의 명복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안타깝게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되레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경찰이 살수차 운용방향을 지키지 않고 백씨의 머리를 향해 발사했고, 백씨 유족 등이 강 전청장 등 7명을 고발했는데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를 일관하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백씨는 숨졌지만, 김·경은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공권력에 의해 시위 참가자가 숨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과오 시정에 나서야 한다”며 “백씨 사망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6일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의해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년여를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운명했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받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진실규명을 요청했지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는 등 궤변으로 국민의 분노와 지탄을 산바 있다”며 “고인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은 국가 폭력이고 유가족이 부검을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검명장을 청구로 강행한 경찰과 검찰의 행위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부검명장 청구 관련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대 병원에 투입된 경찰 병력을 모두 철수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희 “농가내부 소득편차 갈수록 심화”

농가소득안정 정책 일반·영세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 때문

국회 김종희 의원(김제·부안)은 26일 정부의 잘못 설계된 농가소득 안정대책으로 말미암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물론이고 농가내부에서조차도 재배품목별, 경지규모별, 소득수준별 농가간 소득편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비율이 2006년 78.2% → 2015년 64.4%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2015년 기준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5780만원, 농가 3722만원)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농가 내부에서조차도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자칫 전체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영세농의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 국가 농업 안전망 전체의 붕괴로 이어져 농촌소멸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재배품목별’ 소득의 경우 축산농가(전체 농가의 5%) 소득은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인 7965만원으로 최근 3년간 2693만원 증가한 반면, 쌀농가(전체농가의 42%)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한참 아래인 2559만원으로 최근 3년간 226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지규모별’ 소득의 경우, 대규모 농가(경지면적 10ha 이상, 전체농가 1%)의 소득은 828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971만원, 연평균 18.6% 증가하였으나, 일반/영세 농가(1ha 미만, 전체의 65%)의 소득은 326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53만원, 연평균 2.8%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또 ‘소득수준별’ 소득의 경우(2013년 기준, 과거 5년간) 농가소득 상위 20%는 7060만원 → 7739만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21만원 → 622만원으로 오히려 32%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20% 소득 2288만원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 68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는 통계청에서 농가 내 계층별 소득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음)

김 의원은 이같은 농가 내 소득편차의 주요 원인은 현행 정부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대부분이 농가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지면적 및 사업규모 등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정를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빈곤 농업인에게는 오히려 적은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소득 안정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정책 예산이 규모 품목 등에 구분없이 전 농민에게 고르게 지원되어 농가소득 유지 및 이를 통한 농업의 존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농가소득 안정 정책과 관련제도를 보다 탄력적, 상대적, 차등적 지원체제로 재설계하여 농가 내 소득격차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지난 15년 기준으로 협의의 소득안정 예산(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사업)으로 총 1.7조원을, 광의의 소득안정 예산(농업자금이자보전 등 각종 융자/보조금 사업)으로 총 5.2조원을 기 집행한 바 있다.

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85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를 넘어서고 있고, 이 중 삼성전자 등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2015년도 영업이익이 약 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제가 말뿐인 성과공유제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과공유를 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점수를 받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인지 확인 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현금배분 실적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대기업의 전문화적인 사내유보금에 비하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현행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엔커녕,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 이제는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 7월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위한 상생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으며,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 “내수진작 위해 장관 골프 박 대통령 상식 초월 발상기 막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술선수범해 골프를 쳐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상식을 초월한 발상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기껏 내놓은 내수진작 대책이 장관에게 골프를 치도록 요구한 것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민생경제 과탄으로 서민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는 골프장과 고급식당의 소비 위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 규탄 1인 시위

양용모·박재만·국주영은 도의원, 세종청사서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의원을 비롯해 박재만(군산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주영은(전주9) 의원이 26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양 의원 등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 규탄과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는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토지주택공사 경남 이전에 따른 민심 달래기를 가져 협약이 되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협약서에 서명한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기관의 책임이 매우 큰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양용모 의원은 “삼성이 투자협약을 파기한 것이 명백해졌지만, 도민에게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며 “도민에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큰 기대를 심어준 삼성투자협약의 파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국주영은 의원은 “대기업이 도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도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집중 제기하고 따져 협약서 체결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1인 시위 도중에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국회 안호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1인 시위에 나선 의원들을 격려했다.

안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이유와 향후 대책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물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인정(군산3) 의원도 이날 12시부터 2시간 동안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을 규탄하고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안호영 “1분위 임차가구 소득 절반이 주거비”

임차가구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진주)과 한국도시연구소, 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는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5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은 11.9%에서 21.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동 기간 2인 이상 청년 가구의 RIR 역시 11.6%에서 2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RIR이 13.0%에서 21.8%로 67% 상승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위 임차가구의 RIR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득의 절반 가까이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5년 소득분위별(1~5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분석 결과 1분위를 제외한 2~4분위별 가구의 RIR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 안팎의 비교적 높은 RIR을 나타내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간의 주택정책, 특히 서민주거 안정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7861억”

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도 7861억원으로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싱·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는 10만16432명, 피해사건은 19만1220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수 5만8898명, 피해사건 10만1630건, 피해금액 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자 수 4만7534명, 대출사기 건수 8만29590건, 피해금액 2613억원에 달한다.

786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환급액 총액은 1944억원으로 피싱사기 환급액 1443억원, 대출사기 환급액이 502억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단속당국이 될 수 있게 고도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기범죄란, 전기통신기법범죄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의 범죄를 말하며,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